

등록번호	폐기물정책과-4025
등록일자	
결재일자	2004.11.09.
공개구분	공개

환경사무관	폐기물정책과장	폐기물자원국장	
11/08	11/09	11/09	
협조자	자원재활용과장 유해물질과장		

## 유해폐기물 국제 논의 동향 및 국내 대응방안

< 7 >

### 1. 개요

- 명칭 : 바젤협약 제7차 당사국총회
- 기간 및 장소 : 2004년 10월 25~29일 (5일간), 스위스 제네바
- 참가자 (3인) : 주 대영 사무관(폐기물정책과), 신 선경 연구관(국립환경연구원), 장 원 사무관(외교통상부)
- 참가 현황 : 당사국(163개국) 대표 및 국제기구(UNEP, IMO), NGO 등 약 400여명

### 2. 주요 논의 및 결정사항

#### □ 논의 중심

- 동 협약의 논의 중심이 “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(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: **ESM**)”에서 “全生涯 統合管理 (Integrated Life-cycle Approach) 및 Partnership”로 전환 중
- 유해폐기물 관리원칙으로 “자국처리, 원천감량 및 수출입 최소화”가 반복 강조

## □ OECD國의 對開途國 수출금지(Ban Amendment) 논의 관련

- 캐나다·호주 등은 동 개정안이 OECD國 해당여부라고 하는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기준으로 설정되었다는 점과,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 역량을 갖춘 개도국의 경제적 이익이 간과됨을 주장
  - EU 및 다수 개도국은 동 개정안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
- 동 개정안 발효요건에 대한 논쟁이 진행중이며, 캐나다·호주 Group은 “현 당사국의 3/4 비준”을, 개도국·NGO등은 “채택당시 당사국의 3/4 비준”을 주장

## □ 잔류성유기화합물(POPs)등의 기술지침 설정

- 12種 POPs의 下限 含量基準(Low content level)을 포함한 기술지침이 마련되었으며, 스톡홀름협약 당사국총회에도 제출될 예정임
  - 하한 함량기준
    - ▷ PCBs : 50 ppm (국내 지정폐기물 기준 : 2ppm)
    - ▷ 다이옥신 : 15 $\mu$ g TEQ/kg

## 3. 국내 대응 방향

### □ 유해폐기물 지정·분류체계 一元化 검토

- 국내 유해폐기물은 “지정폐기물(국내 관리용)”과 “국가간이동통제 대상폐기물(수출입 통제용)”로 이원화 관리되고 있음
  - 국내적으로는 지정폐기물에 해당됨에도 중국 등으로 자유롭게 수출처리되는 품목 존재
- ▶ 지정폐기물 “적용대상 범주, 위해특성 및 지정기준” 등을 바젤협약 및 EU기준등을 감안 재조정 추진
- ▶ 수출입 통제대상에 모든 “지정폐기물”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추진

## □ 국내 폐기물 관리기준의 국제적 조화 추진

- 현재까지 “POPs, 의료폐기물, 플라스틱, 납 축전기, 금속회수 및 폐선박” 등에 대한 管理指針과 독성·감염성 등 有害特性 基準 등이 개발·채택되었음
- ▶ 국내 관리체계를 국제기준과 조화시키기 위하여 동 협약에서 정한 “관리지침, 유해특성 기준” 등을 폐기물관리법에 반영·활용

## □ 협약 결정사항의 국내 이행체계 마련

- 관리지침의 활용현황('05.7까지), 유해폐기물 수출입 실적자료('04.12까지) 제출 등 당사국으로서의 협조·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
- ▶ 수출입 통제대상 폐기물, 허가절차등을 수출입업자에게 적극 홍보하고, 관계행정기관간 협조체계를 수립하여 불법교역 방지 주력

## □ 대개도국 수출금지 논의에 대한 국내 대응방안 마련

- Ban Amendment 발효, 각국의 유해폐기물 수입통제 강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우리부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함
  - 유해폐기물의 원천적 발생억제, 처리역량 확충, 수출입 최소화 및 전생애 관리 등을 위한 국내 제도의 내실화 및 선진화 방안 필요
- ▶ 국내의 유해폐기물 품목별 처리 기술 수준, 시설여건 등 현황을 파악하고, 국내 처리 역량이 없는 유해폐기물 품목 확인 필요

## □ 아시아지역 당사국간 협력 및 업계와의 파트너십 강화

- 아시아지역 당사국, 협약의 지역센터(북경, 자카르타)와의 교류·협력을 강화하고, 우리나라 지원 방안을 모색할 시점임
- ▶ 휴대폰의 재사용·재활용 촉진을 위해 진행중인 협력 프로그램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문제를 관련 업체와 협의

## □ 책임배상의정서(Basel Protocol) 관련 논의 대응

- 동 의정서 발효가 국내 산업 및 폐기물관리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, 이에 대한 국내외 장기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
  - 다만 의정서가 실질적 영향력을 갖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
- ※ 동 의정서 발효에는 20개국의 비준이 필요하나, 현재 비준국은 4개국(보츠와나, 토고, 이디오피아 등)에 불과

## □ 선박해체에 관련 논의 동향 대응

- 선박해체시 발생하는 유해폐기물과 관련하여, 국내 선박해체 현황, 노후선박 수출 현황 등에 대한 업계조사를 통해 국내 대응방향을 설정 필요

## 4. 기타 사항

### □ 환경장관회의(일본, '05.4)에 우리나라 참석 요청

- 일본환경성은 G7 및 아시아국 환경장관, 국제기구 사무총장이 참석하는 장관급회의 개최 계획을 우리나라 대표단에 설명하고, 우리나라의 참석을 요청
  - 회의주제 : 폐기물 감량·재이용·재활용(3R Initiatives)